



주간통일정세 2012-09(2012.02.20~02.2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2-0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日 조총련 서만술 의장 사망(종합)(2/20, 연합뉴스)**
 -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암으로 오랜 기간 투병 중이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의 서만술(徐萬述) 의장(87)이 지병으로 19일 오후 숨졌는데 서 의장은 조총련 중앙위원회 조직국장, 중앙위원회 부의장, 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 등을 거쳐 2001년 5월 조총련 의장(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 취임했으며 현재 조총련은 사실상 허종만 책임부 의장이 이끌고 있음.
- **北당대표자회 4월 소집...권력재편 주목(종합2보)(2/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4월 중순에 당 대표자회를 소집할 것을 예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전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정치국 결정서에서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며 김정은 동지의 두리(주위)에 굳게 뭉쳐 주체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 당 대표자회를 주체 101(2012)년 4월 중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힘.
 - 이번 당 대표자회의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北총리, 희천발전소 시찰(2/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18~19일 자강도 희천발전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전하면서 최 총리는 발전기실 등을 찾아 전력계통 현대화와 생산실태를 파악하고 전력생산을 정상화를 촉구했으며 또 전력공업 부문에서 현존하는 발전소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높이고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지시했다고 밝힘.
- **김정은, 軍 미사일지도국 시찰(2/21,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인민군 제842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1일 전함.
 - 김 부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소식은 지난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 이후 처음으로 지난 8일 제324대연합부대 지휘부와 예하 군부대를 방문하고 13일 만인데 부대 내 연혁실과 군사연구실을 찾아 전투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군인회관, 도서실, 식당, 취사장 등의 시설을 둘러봄.
 - 이날 시찰에는 박재경 대장과 리두성 중장 등이 수행함.



- **北, 태양절 앞두고 추가 대사면 준비(2/22, 좋은벗들)**
 - 북한이 조만간 또 대사령(大赦令, 사면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이 22일 전했다.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443호)에서 북한 중앙당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을 맞아 대사령을 내릴 것을 전국 도당에 지시했다고 주장함.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5일 정령을 통해 김 주석 100회 생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앞두고 2월1일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주민들을 사면키로 한 바 있는데 이 대사령은 2005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것임.
 - 소식지는 "지난달 1일 함경북도 회령시 인근에 위치한 전거리교회소에서 대규모의 수감자 사면이 있었다"며 "전국 노동단련대와 교회소 등지에서는 경제범죄자 등 각종 범죄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실시됐다"고 전함.

- **北김정은, 경기용총탄 공장서 사격시범(2/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양시내에 있는 경기용총탄 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경기용총탄 공장은 북한의 국방체육 경기종목인 사격경기를 위한 총알을 생산하는 곳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1996년 2월 청춘거리에 건설되었는데 김 부위원장은 이번 시찰에서 공장 내의 화학실험실과 물리실험실 등을 둘러보고 소재 생산에서 조립에 이르는 총알생산 공정과 각 설비의 기술적 특성·성능 등을 점검했으며 공장 내에 위치한 메아리사격관 등을 돌아본 뒤 시설을 더욱 개선해나가기도록 지시함.
 - 이번 시찰에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동행함.

- **김정은, 김정일 생일 기념음악회 또 관람(2/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2월16일)을 기념하는 은하수 광명성절 음악회 '태양을 따르는 마음'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함.
 - 중앙통신은 관람자들이 음악회에 앞서 김 위원장을 추모하며 묵상했고, 음악회가 끝난 뒤에는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를 외쳤다고 전함.
 - 음악회 관람에는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강석주 내각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 당비서,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을 비롯한 당·정·군 고위간부 등이 참석함.

- **北, 해산물 수출 연초 중단...태양절 준비(2/25, 교도통신)**
 - 북한 김정은 군사위 부위원장이 오는 4월15일 조부인 김일성주석 100회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식량 배급을 늘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



- 당국이 연초부터 해산물 수출을 금지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5일 보도
- 교도통신은 이날 북한과 중국간 무역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새 지도자 김정은 부위원장이 식량 배급을 늘려 인민들의 삶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 北 김정은 "개방이란 말 사용하지 말라"(2/26, 도쿄신문)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당 간부들에게 '개방'이라는 말의 사용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
- 이 신문은 북한 노동당 관계자를 인용해 김정은이 자신의 생일인 지난 1월 8일 노동당의 사업을 결정·지도하는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고급간부들에게 국가 운영과 관련 "개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 신문에 의하면 당시 측근인 이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이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은 동향

- 2/21 김정은 부위원장, 인민군 제842군부대 시찰(2.21, 중통·중방)
 - 박재경(軍 대장), 리두성(중장) 등 동행
- 2/23 김정은 부위원장, 경기용 총탄공장 현지지도(2.23, 중통·중·평방)
 -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동행
- 2/24 김정은, 은하수 광명성절음악회 공연 '태양을 따르는 마음' 관람(2.24, 중방)
 - 이영호, 김기남, 최태복, 강석주, 장성택, 김양건, 박도춘, 최용해, 태종수, 김평해, 우동축 등 함께 공연 관람
- 2/26 김정은, 서남전선지구 조선인민군 제4군단사령부 관하 군부대들 시찰(2.26, 중통·중·평방)
 - 김명국·김원홍·박재경(대장)·황병서(黨 부부장)·김춘삼(상장) 및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김위원장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민족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애국애족적 통일방침' 선전 및 '南 당국의 대결정책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족 대단결' 강조(2.21, 노동신문/대단결의 지침을 마련해주신 불멸의 업적)
-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2.21 美-北고위급회담(2.23/베이징) 참가차 평양 출발(2.21, 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2.24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平南 안주시) 현지 요해(2.24, 중통)



나. 경제

● '강성대국' 상징 희천발전소 시운전(2/21,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김정일 동지와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 밑에 새로운 천리마 속도, 희천 속도로 짧은 기간에 건설된 희천 1호, 2호 발전소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전기를 보내주기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다"며 북한이 '강성대국'의 상징물로 야심차게 건설해온 자강도의 희천발전소가 시운전에 들어간 사실에 대해 밝혔다고 21일 전함.
- 청천강 상류에 위치한 이 발전소는 강의 흐름을 변경해 높은 낙차로 전력을 생산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소이며, 발전용량은 남한의 충주발전소(40만kW)와 소양강발전소(20만kW)의 중간 규모인 30만kW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매체가 이 발전소의 착공 소식을 처음 전한 것은 2001년 3월이지만 2009년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2년까지 무조건 완공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사 진행 속도가 빨라짐.

● 北, 보통강변에 수산물 전문상점 개업(2/2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수도 평양의 보통강 기슭에 새 수산물상점이 21일 개업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2일 보도
- 새 수산물상점은 연면적 3천940여㎡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설됐으며 상점 1층에는 생선 및 냉동생선, 건어물, 명란, 조개 등을 비롯해 다양한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꾸며졌고, 2층과 3층에는 각종 생선요리를 비롯해 냉면, 불고기, 청량음료 등을 판매하는 식당이 들어섰음.

● 中, 훈춘-北원정리 잇는 新두만강대교 건설 계획(2/22, 연변인터넷방송)

- 북한 라진항을 이용한 동해 항로를 확보한 중국이 올해 라진항으로 가는 관문인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훈춘(琿春)과 북한의 원정리를 잇는 새로운 두만강대교 건설에 나선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22일 보도함.
- 현재의 두만강대교는 1936년 세워진 노후 교량인 데다 폭이 6.6m에 불과해 차량의 교차 운행이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연간 60만t을 통관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중국은 2010년 6월 이 다리를 보수했으나 라진항 이용이 본격화되면 늘어나는 교역량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신두만강대교 건설을 검토해옴.
-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와 원정리를 잇는 새 다리는 기존 다리의 상류 50m 지점에 길이 577m, 폭 25m(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다리가 세워지면 연간 물동량이 지금의 2배 수준인 120만t으로 늘어나게 됨.



- **北남포 더 이상 '부동항' 아니다...4년 연속 결빙(2/23, 연합뉴스)**
 - 북한 제1의 항구이자 평양의 관문인 남포항이 2009년 이후 해마다 얼어 붙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포항은 그동안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아 1년 내내 배가 드나들 수 있는 부동항(不凍港)으로 인식돼 왔음.
 - 고려대기환경연구소가 23일 공개한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의 2001~2012년 겨울철 북한지역 위성사진을 보면 2009년부터 매년 서한만 일대에 해빙이 관측됨.

- **북·중 과학기술협조위 열려(2/24,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의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5차 회의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 중앙통신은 중국을 방문한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표단과 중국 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의정서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 **北서 일본제 중고컴퓨터 대량 유통(2/25, 니혼게이자이신문)**
 - 북한에서 일본제 중고 컴퓨터가 대량 유통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
 - 이 신문에 의하면 경시청이 지난 7일 외환관리법(무허가 수출) 위반 혐의로 구속한 중고 컴퓨터판매사 사장 이모(49·재일 북한인·도쿄거주) 씨를 조사한 결과 중국 다렌의 북한계 무역회사 '다렌 글로벌'을 통해 2008~2009년 4차례 걸쳐 4천대 이상의 중고 컴퓨터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음.
 - 이들 중고 컴퓨터는 북한의 암시장에서 대당 300달러 이하에 판매되고 있음.

- **北 노동당, 남북 경제협력 추진 지시<日紙>(2/25, 마이니치신문)**
 - 북한 노동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당 간부들에게 남북 경제협력 추진을 지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
 -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 노동당 지도부가 김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인 지난 1월 6일 당 간부들에게 배포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조선노동당의 경제노선과 임무'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 신문에 의하면 북한 노동당 지도부는 이 문서에서 한국과의 관계와 관련 "북남 경제협력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중단된 금강산 관광에 대해 "(협력 추진은) 북남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다. 군사

- **北김정은 키리졸브 앞서 연평 포격부대 시찰(종합)(2/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010년 연평도 포격도



발을 일으킨 서남전선지구에 있는 인민군 제4군단 사령부 예하 군부대 들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 중앙통신은 특히 김 부위원장이 남측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하면 강력한 보복타격을 가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해 이번 4군단 시찰이 지난 20일 서북도서 지역의 해병대 해상사격훈련에 대응하면서 '키 리졸브 훈련' 등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음을 시사했음.
- 통신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최전방에 있는 4군단 산하 제403, 688, 493, 641 군부대 예하 대대 등을 잇달아 시찰하고 전투태세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

라. 사회·문화

● 北철도전문가 33명, 러시아서 연수(2/21, 연합뉴스)

- 21일 러시아 극동철도(FER)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추진 중인 라진-하산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와 연계해 진행되는데 연수 참가자 중 24명은 블라디보스토크 북쪽에 있는 우수리스크 연수원에서, 나머지는 러시아 극동기술대(FESTU) 프리모르스키 분교에서 각각 7주간 철도 관련 전문교육을 받을 예정임.
- 북한과 러시아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83억루블(약 3천500억원) 규모의 라진-하산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라진-하산 52km 구간의 낡은 선로와 역사 등 기반시설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북한 라진항에 화물 터미널을 건립하는 내용임.
- 러시아는 라진항에 화물 터미널이 건립되고, 라진-하산 철도를 통해 러시아 철도망과 연결되면 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본격적인 환적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北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속도 亞太서 가장 느려(2/21, 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 달성하려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 속도 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느린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됐는데 새천년개발목표는 1일 1달러 25센트 이하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 인구를 1990년 18억 명에서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음.
-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홈페이지(www.adb.org)에서 확인한 ADB,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유엔개발계획(UNDP)의 공동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새천년개발목표(MDGs) 2011~2012'에 따르면 5세 이하 영아와 신생아의 사망률, 삼림 황폐화, 부실한 위생환경 등을 근거로 북한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보면 북한의 신생아 사망률은 1990년 1천 명 당 23명에서 2010년 26명으로 늘었으며 결핵 발병률은 1990년 10만 명 당 344명에서 2009년 345명으로 증가했고, 이밖에 1990년 68.1%였던 북한의 삼



림 비율이 2010년 47.1%로 줄었고, 기본적 위생시설 역시 2008년 현재 1990년의 59% 수준에 머물고 있음.

- **北 재해취약성 낮다?...자료부족 탓(2/22, 미국의 소리(VOA))**
 -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ECHO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1~2012 전세계 수요평가' 지수에서 북한의 '재해 취약성' 지수는 평점 1.17점으로 139개 개발도상국 가운데 35번째로 낮았음.
 - 재해 취약성 지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고통받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0점이 최저이고 3점이 최고점이며 지수로만 본다면 북한의 재해 대응 능력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결과는 북한 관련 통계자료 부족에서 빚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VOA는 전함.
 - 재해 취약성 지수는 난민비율, 5살 미만 영유아의 영양실조비율, 공공 보건 실태, 유엔개발지수, 성평등, 부의 분배 등 총 9개 분야를 평가해 산출하는데 북한은 유엔개발지수, 성평등, 부의 분배 등에 대한 자료가 아예 없었다는 것임.
 - 북한의 가장 취약한 분야는 5살 미만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로 분야별 최고점인 3점을 받았으며 영유아 사망률은 2점, 의사 수와 어린이 예방접종률 등을 평가한 보건실태는 1점을 받았으며,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확산율 등은 각각 1점이었는데 VOA는 유럽연합이 인도주의적 지원 대상을 결정할 때 취약성 지수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2012~2013년 인도적 지원 대상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함.

- **北 '독도 영유권'에는 南과 한마음(2/22, 평양방송;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 북한 매체는 최근 남한 민간단체의 활동까지 자세히 소개해가며 일본의 주장과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데 평양방송은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을 제정해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독도강탈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것이며 일본과는 끝까지 결판을 내고야 말 것"이라고 다짐함.
 -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4일 독립유공자협회 등의 남한 민간단체가 지난 10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최근 독도 영유권 발언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소식을 전함.
 - 또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일본의 망상'이라는 논평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전쟁도발행위"라며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반성,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함.

- **북한주민 기대수명 69.2세...세계 151위(美CIA)(2/23, 연합뉴스)**
 -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69.2세로 여전히 세계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3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홈페이지



(www.cia.gov)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65.34세, 여성 73.24세로 남녀 평균이 69.2세로 추정됨.

- **평양서 9월에 첫 '영국문학축제'(2/2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평양에서 오는 9월 영어로 진행되는 '평양영국문학축제'가 처음 열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 日정치인 등 60명 초청...北日 해빙 무드(2/20, NHK)**
 - 북한이 고(故)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정치인 등 일본 인사 60명을 초청했다고 NHK 방송이 20일 보도했음.
 - 이 방송에 의하면 북한 지도부는 오는 4월 15일의 김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일본의 전 국회의원과 연구자, 민간단체 인사 등 약 60명을 초청했으며 초청받은 인사는 북한과 관계가 깊은 인물들이며, 이들은 4월 15일을 포함해 약 10일 정도 북한을 방문하기로 하고 준비 중임.
- **中외교부, 탈북자는 난민 아닌 "불법 월경자"(2/21,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1일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복송 중단 요구에 대해 "관련 인원들은 경제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이른바 불법 월경자"라고 강조함.
- **中, 탈북자 9명 투면 통해 이미 복송(2/23, 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최근 연지(延吉)에서 체포한 탈북자 9명을 지난 주말 복송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는데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에서 잇따라 체포된 탈북자 30여명의 강제복송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와 접촉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중국 측이 탈북자 복송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임.
- **WFP, 대북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 내달 종료(2/23,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긴급식량 지원을 다음 달 종료하고 4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WFP는 지난해 4월부터 북한주민 35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식량지원'을 예정대로 다음 달 종료하고 4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할 영양지원사업을 할 예정임.



● UNHCR, 中 정부에 탈북자 송환 중단 촉구(2/24, 연합뉴스)

-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는 24일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처벌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송환 중단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음.
- 에이드리언 에드워즈 UNHCR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UNHCR은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25명 안팎의 북한주민들의 상황을 밀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 당국과 대화해왔으며, 중국 정부가 난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음.

■ 기타 (대외 일반)

- 日방위상이 美국방장관에게 스텔스전투기(F-35)를 일본에 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 관련 '미국의 도움을 받아 군사대국화와 해외 팽창야망을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비난(2.20, 중통·노동신문·평방/불순한 기도가 깔린 청탁놀이)
- 韓-美연합대잠수함훈련(2.20~24) 실시 관련 '흡수통일 야욕에 빠져 현실감마저 상실한 무지한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 대화타령의 기만적 정체가 드러났다'고 지속 비난(2.21, 우리민족끼리/전쟁과 대결소동은 출로가 될 수 없다)
- 美國의 '亞·太지역 합동군사연습 실시·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추진' 등은 '주도적 지위·경제적 지배권 확립을 노린 美 지배주의 책동의 일환' 이라고 비난(2.24, 중통/아시아태평양지역에 검은 마수를 뻗치는 미국)

나. 6자회담(북핵)

● 北김계관, 북미회담 참석차 베이징 도착(2/21, 연합뉴스)

-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에 참석을 위해 21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했으며,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내려 주중 북한대사관 측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시내로 향했으며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은 23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임.

● 北 "핵안보정상회의 수수방관 앓을 것"(종합)(2/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엄중한 도발'로 규정하고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했다.

● 북미 고위급 회담, 베이징서 4개월 만에 재개(2/23, 연합뉴스)

- 북한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첫 북미대화가 23일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이하 현지시간)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만나 제3차 고위급 회담을 시작



했으며 지난해 10월28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린 이후 4개월 만임.

- 북측 대표단은 김 제1부상과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 최선희 부국장, 미측은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클리포드 하트 6자회담 특사, 시드니 사일러 국가안보회의(NSC) 한국담당 보좌관 등으로 구성됨.

● 김계관 "협상 긍정적", 데이비스 "진지한 대화"(2/23, 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이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영양지원 문제에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가진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진지한 태도로 임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함.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오늘 북측과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본질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오늘 이야기가 중단된 부분부터 내일 다시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내일은 좀 더 진전을 이뤄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대북 영양지원 문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논의 했다"고 답함.
- 이날 오전 주중 북한 대사관, 오후 미국 대사관을 오가며 가진 셔틀 회담에서 미국측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 등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측은 30만t 규모의 곡물지원과 대북제재 해제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짐.

● 中, 日·美와 잇단 접촉...6자회담 재개 쟁결음(2/24, 신화통신)

-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23일 베이징(北京)에서 일본 측 카운트파트인 스키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회담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함.
- 우리 쪽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2일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대표와 만나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에 협의한 바 있으며 이번 3차 북미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북미회담 진전, 비핵화-영양지원 의견 접근(종합)(2/24, 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이 이틀간에 걸친 제3차 고위급 회담에서 핵심쟁점인 비핵화와 영양지원 문제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처음 열린 북미 대화에서 양측은 후속회담에 대한 합의는 없었지만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이번 회담의 큰 성과로 꼽힘.
-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이들간 회담을 끝내고 숙소인 웨스틴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확산과 인도주의적 사안, 비핵화 등에 대해 진지하고 유용한(serious and useful) 대화를 했다"고 밝혔으며,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특히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핵심쟁점에 대해 "다소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 **임성남 "3차 남북 비핵화 대화 개최 기대"(종합)(2/25, 연합뉴스)**
 -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5일 "앞으로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남북 비핵화 대화도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림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을 가진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3차 남북 비핵화 대화 개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지난해 이미 두 차례 남북 비핵화 대화가 있었고 두 차례 북미회담도 있었다"며 "이번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미대화도 그 결과를 기초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가 맞물려 있음을 강조

- **北김계관, 中우다웨이 회동...북미회담 설명(2/25, 연합뉴스)**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휴일인 25일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났으며, 김 부상은 이날 오후 차량을 타고 숙소인 주중 북한 대사관을 나와 중국 외교부 별관 청사에 들어갔다.
 - 김 부상은 이곳에서 우 특별대표를 만나 23~2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디브리핑(사후 설명)하고 이후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미회담 '진전'..남북관계도 돌파구 마련될까(2/26, 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이 23~24일 베이징에서 열린 3차 고위급 회담에서 핵심쟁점에 대해 "다소 진전"을 이루는 데 성공하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특히 미측이 이번 북미회담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북측에 강하게 주문함에 따라 6자회담 재개과정에서 남북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 그러나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기조를 고려할 때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임.



■ 기타 (대외 일반)

- 광명성절 기념 '2월의 봄 음악회', 2.11 美 뉴욕 맨하탄에서 진행 (2.21,중통)

3. 대남정세

- **北 "연평도 몇천배 징벌" 거듭 위협(종합)(2/20,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일 우리 군이 이날부터 서해 5도 일대에서 실시하는 해상사격훈련과 관련해 "무모한 선불질을 강행한다면 연평도 포격전의 몇 천 배 되는 무서운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위협함.
 - 한편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 군이 예고한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의 훈련이라고 비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정전협정 체결을 요구했으며 신문은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을 통해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한 이상 미국은 우리 민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남조선에서 침략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며 "적대시 정책과 핵전쟁 전략을 포기하고 한시바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데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함.
- **정명훈, 北 관계자와 남북 합동공연 논의(종합)(2/20, 연합뉴스)**
 -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관계자와 만나 남북 합동공연 등을 논의함.
- **서북도서 사격훈련 종료..北포병전력 이동(종합)(2/20, 연합뉴스)**
 - 20일 오전에 실시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의 해병대 해상사격훈련이 북한의 도발행위 없이 종료됨.
 -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가량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했다"면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의 해병부대에 배치된 편제 화기의 성능 확인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진행된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밝혔으며 "훈련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북한군은 평상시보다 증강된 대응태세를 유지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북도서에서 통상적인 훈련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함.
 - 북한군은 우리 군의 훈련 시작 전 일부 포병전력을 전방으로 이동시켰으며 대함유도탄의 레이더 가동 징후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유엔인권이사회서 탈북자문제 제기(종합)(2/21, 연합뉴스)**
 - 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문제와 관련해 이달 말부터 스위스에서 진행되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중국을 겨냥해 국제협약상 강제송환 금지 지원책을 준수할 것을 거론키로 함.

- 정부가 유엔총회 등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바 있지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을 겨냥해 탈북자 강제복송 금지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 北 "이명박 정부에 기대할 것 없어" 비난(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은 21일 '비망록'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주범'으로 규정하고 "이런 자에게 이제 무엇을 더 기대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비난하면서 "이명박 역적패당이 집권 4년간 저지른 10대 반통일 죄악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비망록을 발표한다"며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부정 ▲남북대화 파탄 ▲민간접촉 및 왕래 차단 ▲남북협력사업 말살 ▲인도주의사업 방해 ▲통일운동 탄압 ▲체제대결 추구 ▲북침전쟁 책동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도발사건' 조작 ▲민족의 대국상 모독 등을 꼽음.

● <李대통령 회견> 남북관계 획기적 제안 없어(2/22,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방점을 뒀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지만 딱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전향적인 제안이나 언급은 하지 않음.
- 이 대통령은 "남북의 가장 1차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남북 대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대한민국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맞을 것이다. 대화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기다리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통일부, 민간통일운동 38개 사업에 8억 지원(2/22, 연합뉴스)

- 통일부는 22일 올해 민간단체의 통일운동 지원사업으로 38개 단체에 총 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지원 사업분야는 통일준비 국민합의 기반강화(8개 사업), 평화통일 증진활동(8개 사업), 북한사회 바로 알리기(7개 사업), 통일교육 및 기타 행사(15개 사업) 등임.

● '긴장고조' 北, 민간교류도 '브레이크'(2/23, 연합뉴스)

- 조계종,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에 이어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추진했던 평양에서의 남북 합동공연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함.
- 정 감독은 중국 베이징에서 19일 북측 관계자와 만나 남북 합동공연 문제를 협의했으나 3월14일 프랑스 파리의 살 플레엘에서 북한의 은하수 관현악단과 프랑스의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합동 공연을 여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으며 다만 지휘는 정 감독이 하기로 하여



한반도가 아닌 프랑스 땅에서 북한 관현악단과 프랑스 오케스트라가 합동공연하는 다소 '어색한' 모습이 연출된 것인데 정 감독은 남북 합동공연을 원했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어 당장은 성사시키기 어려웠다고 전함.

- **정부, 北 무반응에도 인도지원물자 반출 승인(종합)(2/23, 연합뉴스)**
 - 통일부는 23일 대북지원단체인 나눔인터내셔널과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의료지원물자의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오후 2건의 대북 인도지원물자 반출을 승인했다"며 "나눔인터내셔널은 황해북도 강남군 인민병원에 지원할 7천만원 상당의 X레이 기기를, 유진벨재단은 평양과 평안남북도의 내성결핵센터에 지원할 9백만원 상당의 진단시약과 의료소모품 등 의료지원물자 반출을 신청했다"고 전함.
- **北 "南이 사격구역 옮겨 참았다"(2/24, 우리민족끼리)**
 -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우리 군의 서해사격 훈련에 대해 "(남측이) 사격구역을 옮기고 포사격하는 흥내만 내 우리 군대가 용케 참았다"고 24일 주장함.
 - 이 매체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편지글 형식의 UCC(순수제작 동영상)를 통해 "서해 5개 섬주민들 무사하십니까. 정말 잘 피하셨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며 이같이 주장함.
- **北, 이산상봉하려면 공동선언 이행 밝혀야(2/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4일 "이명박 패당이 진정으로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북과 남의 온 겨레 앞에 공식사죄하고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이행할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정부가 지난 14일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권은) 집권한 후 북남관계발전의 초석이고 조국통일의 표대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그 이행을 통째로 가로막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음.
- **北,李大통령 기자회견 비난(2/25,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 대해 "파국과 혼란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고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것도 없으며 자화자찬과 변명, 책임회피로 일관된 것"이라고 비난
 - 노동신문은 25일 '반역정권 타도, 이것이 지난 4년간의 총화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온갖 반민족적 죄악과 오물정치로 얼룩진 보수패당의 집권 4년간을 한마디로 총평하면 '낙제'라며 이같이 밝혔음.



- **北적십자, 정부 '탈북자복송반대' 입장 비난(2/25, 연합뉴스)**
 - 북한(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25일 탈북자 송환 문제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괴뢰역적패당의 '탈북자복송반대' 소동은 또 하나의 반공화국 모략 광란극"이라고 비난
 - 적십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을 통해 "원래 '탈북자' 문제는 난민 문제가 아니며 적대세력의 반공화국 제재압살 소동과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납치책동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北 한미군사연습 비난..."거족적 성전 진입"(종합)(2/25, 연합뉴스)**
 - 북한은 한미 양국이 실시할 예정인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연습' 등 합동군사연습을 비난하며 "민족반역의 무리들과 내외 호전광을 매장하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국방위원회는 2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우리의 애도기간을 노리고 감행되는 불한당들의 용납할 수 없는 전쟁광기이고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침해"라며 이같이 위협했음.

- **27일부터 키리졸브훈련 돌입.. 대북감시 강화(2/26,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27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연합훈련에 대비해 대북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했다고 군 관계자가 26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군은 내달 9일까지 진행되는 훈련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최전방지역의 대포병레이더, RF-4 정찰기, U-2 고공전략정찰기 등 대북 감시자산을 총가동하고, 공군 F-15K 등 초계전력을 비상대기토록 했음.

- **서울시, 올해 6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종합)(2/26, 연합뉴스)**
 - 경평축구 대회와 서울시향의 평양공연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올해 6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이며, 서울시는 올해 44억 원의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투입, 인도주의적 동포애에 기반을 둔 6개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음.



■ 기타 (대남)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접촉 불허에 대한 정부 입장(6.15공동선언 이행문제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 등) 관련 "억지주장"이라며 '역적패당이 진실로 북남대화 재개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공개질문에 하루빨리 대답해야한다고 주장(2.20,평방/억지주장은 통할 수 없다)
- 南 당국의 이산가족상봉 실무접촉 제의는 '反北대결책동의 총파산으로 통치위기에 직면한 보수당국의 유치한 기만극에 불과하다'고 지속 비난(2.21,중통·노동신문/민심을 끌기 위한 유치한 기만극)
- 統一部の 대북정책(기회의 창, 이산가족교류촉진계획 등)도 '李○○정권의 돌격대가 된 대결부의 기만적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持續 비난(2.21,우리민족끼리/자가당착)
- 우리 정부의 '탈북자 송환문제 국제화' 움직임 관련 '국제협약을 부당하게 걸고 내정에 간섭하는 외교적 망동'으로, '접경지역 단속처리 문제는 주권국가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강변(2.24,우리민족끼리/불순한 외교적 망동)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中 "북미대화서 6자회담 재개 조건 만들길"(2/20)**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0일 "(베이징에서의) 제3차 북한·미국 고위급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만드는 적극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3차 북미대화 개최를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관련된 각 측과 한결같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3일 베이징에서 제3차 고위급 대화를 열어 식량 지원과 북핵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담 장소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보안 유지를 위해 베이징의 북한 또는 미국 대사관에서 개최되거나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회담 일정도 23일 하루가 될 공산이 크지만 회담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데이비스 미 국무부 특별대표는 이달 22일 베이징에 도착해 25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김계관 제1부상은 21일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조현동 외교부 북핵단장, 북미회담 조율차 방중(2/21)**
 - 우리측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 조현동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3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함. 정부 소식통은 21일 "조 단장은 제3차 북미 고위급 대화와 관련한 사항들을 미국 대표단과 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의 방중에는 이문희 북핵협상과장을 비롯한 외교부 실무직원들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베이징을 방문 중인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22일 오전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23일 회담을 가짐. 회담 일정은 애초 하루로 예고됐지만 대화 진전 여부에 따라 하루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음.
- **中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시험대"(2/22)**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2일 "6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제3차 북미



대화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음. 그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가 각 측의 공통이익에 들어맞을뿐더러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이기도 하다"며 "유관 각 측이 대화와 접촉의 정세를 유지해 협상으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각 측과 건설적 노력을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 美데이비스 대표 "6자회담 재개 北에 달려"(종합)(2/22)

-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2일 "6자회담 재개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4시30분(이하 현지시간) 현지 숙소인 웨스틴호텔 로비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 지역의 모든 당사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원하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 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북측 회담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전날 "우리는 기다릴 것"이라며 미측에 공을 넘긴 것에 대한 일종의 화답으로 회담시작 전부터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전개됐음.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북한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는 사인을 원한다"면서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서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킬 자세가 돼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우리농농축프로그램 중단 등) 비핵화뿐만 아니라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도 의제로 삼을 계획"이라며 "북한이 협조적인 태도(cooperative spirit)와 모든 의제를 논의할 자세로 회담에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또 북한이 요구하는 30만t 곡물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은 북한 주민의 복지에 관한 깊은 관심과 영양지원 수요에 대한 기술적 평가에 기반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내일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식량지원은 별개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던 미측이 이번 회담에서 두 문제를 함께 다룰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은 주목할 대목임.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우리는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미래를 논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에 최근 변화가 있었으니 새로운 지도부가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뒤 비교적 빨리 북미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본다"며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음.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미측 대표단과 함께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했음. 전날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에 도착한 김 제1부상은 공항에서 "이번 대화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기다릴 것"라고 짧게 답했음. 김 부상의 이런 발언은 6자



회담 조기 재개와 대북 영양 지원 등 북한의 요구 사안에 대해 미국이 먼저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됨.

- 북미는 23일 오전 9시께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회담을 시작함. 회담 일정은 애초 23일 하루로 예고됐지만 대화 진전 여부에 따라 하루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음.

● "러, 북핵문제 해결서 한국과 협력 관심"(2/22)

-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국과 협력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모스크바 크렘린궁의 알렉산드롭스키 홀에서 위성락 주러 한국대사를 포함, 신임 8개국 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에서 한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메드베데프는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은 뒤 러시아와 8개국과의 관계를 각각 언급하면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러시아의 우선적이고 유망한 파트너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여러 분야에 걸친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양국 모두의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 메드베데프는 그러면서 "우리는 물론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러시아가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였음. 위 대사는 이날 신임장 제정식이 끝나고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한 개별 면담에서 오는 3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을 거듭 요청했고 이에 메드베데프는 "정상회의에 참석해 친구인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위 대사는 전했다.
- 지난해 11월 부임한 위 대사는 이날 한국, 스위스, 미국, 리투아니아, 코트디부아르, 잠비아, 인도네시아, 파나마 등 8개국 대사 가운데 가장 먼저 신임장을 제정했음. 이날 신임장 제정식에는 러시아 측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프리호디코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외교수석)이 배석했음.

● 中매체 "북미회담, 6자회담 재개 분수령"(2/23)

-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이 6자회담 재개 여부를 가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3일 보도했음. 이 매체는 이날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특별대표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만나 6자회담 재개 등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번 회담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 처음 열리는 북미 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 중국신문사는 이번 회담이 작년 7월 뉴욕, 10월 제네바에 이은 세 번째 개최되는 것이라고 소개했음. 아울러 미국 측이 비핵화 전제조건으로 북한 측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또 북한 측이 그런 비핵화 조치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미국 측은 북미관계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미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서로 의견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후속 대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음. 중국신문사는 이번 회담에 대해 중국 정부가 환영을 표시하고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만들 적극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중국신문사는 제3차 북미회담이 김 위원장 사망 2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의 대외 정책 노선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음.

● 中 "9·19 공동성명 실현이 공동이익에 부합"(2/23)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3일 "6자회담 조기 재개와 (2005년에 합의된) 9·19 공동성명 실현이 관련된 각 측의 공동이익에 들어맞는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묻자 이같이 말했음. 그는 "대화만이 조선 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정확한 길"이라면서 "6자회담은 각 측의 우려와 한반도 비핵화를 푸는 유효한 방법이며 가능하다면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아울러 "중국은 관련 각 측이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해가는 걸 지지한다"고 밝혔음. 홍 대변인은 그러나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뉘 베이징(北京)의 북한대사관과 미국대사관에서 번갈아 열리는 제3차 북미회담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음.

● 中, 日·美와 잇단 접촉...6자회담 재개 쟁점(2/24)

- 중국이 북핵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음. 북한과 미국 간에 3차 고위급 회담이 24일까지로 하루 연장된 가운데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담 당사국 수석대표들과 잇따라 접촉에 나서는가 하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연일 회담 조기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23일 베이징(北京)에서 일본 측 카운트파트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회담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음. 우다웨이 대표는 회담에서 스기야마 국장에게 6자회담이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다웨이 대표는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이 종료되면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임.
-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6자회담 수석대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방중 기간에 우다웨이 대표와 만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함. 그러나 중국은 북미회담 종료 후 적절한 채널을 통해 북한 측으로부터 회담 내용



- 을 디브리핑(사후설명) 받을 것으로 예상함.
- 조만간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됨. 우리 쪽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2일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대표와 만나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에 협의한 바 있으며 이번 3차 북미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이런 가운데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6자회담을 조기 재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날리고 있음.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지난 20일 "3차 북미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만드는 적극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한데 이어 22일 "6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라고 톤을 높였음. 홍 대변인은 아울러 23일에는 "6자회담 조기 재개와 (2005년에 합의된) 9·19 공동성명 실현이 관련된 각 측의 공동이익에 들어 맞는다"고 강조했다.
- 관영 신화통신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중국중앙(CC)TV 등은 북한 김정은 지도체제 2개월 만에 개시된 북미회담 결과에 낙관론을 펴면서 6자회담 조기 재개로 이어가야 한다고 균불을 지피고 있음.

● 美데이비스 특별대표 "6자 재개, 갈길 멀어"(종합)(2/25)

-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북미 3차 고위급대회를 마치고 25일 한국을 방문한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자 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음.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 내 동료들과 북미대화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서울로 곧바로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는 "하루 정도 머물면서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만날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 그는 북미대화에서 진전을 이룬 부분을 묻는 말에는 "먼저 한국 정부 내 동료와 논의해보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음. 그는 전날도 3차 북미대화에서 "다소 진전이 있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도림동 외교부청사에서 임 본부장을 만나 회담 결과를 디브리핑(사후설명)하고 6자 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데이비스 대표와 임 본부장은 회담 뒤 공동으로 약식 기자회견을 할 계획임. 그는 26일 일본으로 출국,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회동할 예정임.

나. 미·북 관계

● <내일 북미회담.. "합의 가능성 반반">(2/22)

- 중국 베이징에서 23일 열리는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은 김정은 체제 출범



- 이후 북한의 첫 대외행보임. 새로운 북한 지도부의 대외정책 방향과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셈임. 북미는 이번 회담에서 영변 우리 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대북 식량지원을 골자로 한 합의 도출을 위해 접점을 모색할 전망이다.
- 외교부의 핵심 당국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북미가 비핵화 사전조치에 합의할 가능성과 그렇지 못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우리 농축프로그램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 등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임. 북미는 작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 우리 농축프로그램을 중단하면 24만 규모의 대북 영양지원(알곡 제외)을 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2월 22일로 예정됐던 3차 북미대화에서 모종의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담이 취소됐음. 그로부터 2개월 뒤 북한이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게 됐지만 상황은 달라졌음.
 - 북한은 식량지원의 양과 종류의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조미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식량지원 문제는 원래 2011년 초에 미국이 3년 전 공약했던 50만 중에서 미달된 33만을 마저 제공하는 문제로 발단됐다"고 주장하면서 곡물 30만의 지원을 요구했음. 북측은 영변의 우리 농축시설 가동 중단 등을 놓고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얻을 것은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의 핵심 요구는 우리 농축프로그램의 중단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확인 및 감시임. 이와 함께 미측은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실험을 유예하고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 대한 확약도 요구할 방침임.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식량지원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나 이번 회담에서 북측의 요구로 함께 협상테이블에 올려질 것"이라며 "우리 농축프로그램의 중단 및 검증과 식량지원의 양과 종류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이번 회담에서 북미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난 3년간 동면상태에 빠졌던 6자회담 재개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됨.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면 언제든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조속한 회담 재개를 지지하고 있음.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에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면 후속 대화를 통한 타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양측이 견해차만 확인한 채 추후 회담에 대한 기약도 없이 헤어지면 북미 대화는 상당기간 열리지 못한 가능성도 있음. 정부 소식통은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미 양자 대화를 오래하는 것보다는 6자회담 재개를 선호한다"며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이번 회담이 결렬되면 상당기간 대화모멘텀을 찾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 美 "베이징회담서 대북 식량지원 논의"(2/23)

-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담기간에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우리 측이 갖고 있는 몇몇 우려사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혀 이번 회담에서 지원식량 모니터링 문제 등을 다시 한 번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 이는 이번 회담의 미국측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미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식량지원이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북미대화 방향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됨. 이에 앞서 마이크 해머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14일 외신기자클럽 브리핑에서 "로버트 킹 북한인권대사가 이번 베이징 회담의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화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주요 초점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음.
- 토너 부대변인은 이어 이번 베이징 회담 전망에 대해 "우리는 이를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라고 규정했다"면서 "늘 그랬듯이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cautiously optimistic)'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북미회담 '신경전'서 대화 분위기로 급반전>(2/23)

-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줄다리기 양상으로 시작된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빠르게 부드러운 대화 분위기로 반전되는 모양새임. 일각에서는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첫 북미대화에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낙관론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임.
- 북한과 미국은 애초 23일 회담을 앞두고 서로 상대방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면서 치열한 '장외전'을 벌였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베이징에 도착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것"이라고 선수를 쳤고,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이에 질세라 "6자회담 재개는 북한에 달렸다"고 공을 다시 상대에게 넘겼다. 대화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법이 서로 상대방에 있음을 강조한 것임.
- 외교가에서는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된 탓에 우리측 농축 프로그램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비핵화 사전조치 요구와 북한의 곡물 지원 요구가 평행선을 달리며 점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음. 이날 오전 10시 데이비스 특별대표



일행이 오전 회담을 위해 북한 대사관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졌음. 북한 대사관 본관 앞에서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차에서 내렸지만 카운터 파트인 김 부상은 현관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지 않고 먼저 회담장에 들어가 있었음. 기싸움 차원의 의도된 '냉대'라는 분석이 나왔음.

- 분위기가 점차 바뀌어간 것은 오전과 오후에 걸친 회담 시간이 점차 길어지면서부터였음. 오전 10시에 시작된 오전 회담은 식사 때를 지나 낮 12시20분까지 계속됐음. 오후 3시쯤 시작한 오후 회담도 예정된 종료 시간인 오후 5시를 1시간 이상 넘겨 6시10분께 마무리됐음. 이어 6시20분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숙소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내일 협상이 재개되고 김 부상 일행과 만찬을 함께한다는 '깜짝 소식'을 전했다. 이날 만찬은 미국 측에서 북한에 제안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음.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내일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북미 대표단 사이에 '스킨십'을 쌓는 만찬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신호로 해석되고 있음. 베이징에 도착한 이후 줄곧 말을 아껴온 김 부상도 만찬이 준비된 웨스틴호텔에 들어설 때 밝은 표정을 지으며 "양측이 진지한 태도로 (회담에) 임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그렇지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예정에 없던 일정 연장과 대표단 만찬 추가가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아직 성급한 판단은 이르다는 목소리가 여전한 함. 한 외교 소식통은 "양측이 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은 적어도 대화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곡물 지원과 미국이 원하는 우리농 농축 시설 정지가 서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 연장이 합의점 도달의 신호로 보기에는 시기상조인 듯 하다"고 말했다.

● 북미 고위급 회담, 베이징서 4개월 만에 재개(2/23)

- 북한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첫 북미대화가 23일 베이징에서 열렸음.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이하 현지시간)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만나 제3차 고위급 회담을 시작했다. 이번 북미대화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린 이후 4개월 만임.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회담장으로 향하기에 앞서 현지숙소인 웨스틴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게임 데이'"라고 밝혀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식량지원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음. 그는 전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취재진을 만나 "(북한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비교적 빨리 북미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본다"며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음.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비교적 활발하게 기자들과 접촉하고 있으나 북한대사관 내 관사를 숙소로 이용하는 김 제1부상은 지난 21일 회담 참석을 목적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 김 제1부상은 입국 직후 공항에서 "이번 대화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기다릴 것"이라고 짧게 답했을 뿐임.
- 미측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 등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북측에 요구할 방침임. 북측은 30만 규모의 곡물지원과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면서 미측으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대표단은 김 제1부상과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 최설희 부국장, 미측은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클리포드 하트 6자회담 특사, 시드니 시일러 국가안보회의(NSC) 한국담당 보좌관 등으로 구성됐음. 이날 오전 회담이 끝나면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오후 회담이 이어짐.

● 김계관 "협상 긍정적", 데이비스 "진지한 대화"(2/23)

- 북한과 미국이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영양지원 문제에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가진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진지한 태도로 임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측 대표가 북핵관련 협상 와중에 이 같은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임.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오늘 북측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본질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오늘 이야기가 중단된 부분부터 내일 다시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내일은 좀 더 진전을 이뤄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영양지원 문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논의 했다"고 답했음.
- 당초 북미는 23일 하루 일정으로 회담을 계획했으나 이를 하루 연장해 24일 오전에 다시 회담을 갖기로 했음. 또 이날 저녁에는 예정에 없던 만찬도 함께 했음. 양측 대표단의 표정은 매우 밝았음. 이에 따라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첫 외교 무대인 이번 북미 회담에서 구체적 합의가 나올수 있을지 주목됨.
- 이날 오전 주중 북한 대사관, 오후 미국 대사관을 오가며 가진 셔틀 회담에서 미국측은 북한의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 등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30만 규모의 곡물지원과 대북제재 해제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음.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김 부상 모두 회담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협상 도중에는 그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며 함구했음.
- 그러나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양측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뒤 일단 합의



된 사항을 본국에 보내 '훈령'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음. 이에 대해 우리 정부측은 선부른 예단을 경계했음. 한 정부 당국자는 "액면으로만 보자면 분위기는 나쁜 것 같지 않음. 논의할 거리가 있으니 만찬도 하고 회담도 연장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음. 또 다른 당국자도 "통상적으로 회담은 아주 판이 깨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틀 동안 진행한다"며 "하루 연장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음.

-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김 제1부상과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 최설희 부국장, 미측은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클리포드 하트 6자회담 특사, 시드니 사일러 국가안보회의(NSC) 한국담당 보좌관 등이 참석했음. 이번 북미 대화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고위급 회담이후 4개월 만임.

● 북미회담 진전, 비핵화-영양지원 의견 접근(종합)(2/24)

- 북한과 미국이 이틀간에 걸친 제3차 고위급 회담에서 핵심쟁점인 비핵화와 영양지원 문제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처음 열린 북미 대화에서 양측은 후속회담에 대한 합의는 없었지만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이번 회담의 큰 성과로 꼽힘.
-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이틀간 회담을 끝내고 숙소인 웨스턴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확산과 인도주의적 사안, 비핵화 등에 대해 진지하고 유용한(serious and useful) 대화를 했다"고 밝혔음.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특히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핵심쟁점에 대해 "다소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음. 그는 그러면서 "영변 UEP를 포함한 비핵화 문제, 비확산, 인도주의적 문제, 인권 등을 모두 논의했고 일본과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납치자 문제도 얘기했다"면서 "북한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특히 한반도에서 더 나은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고 밝혔음.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그러나 회담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그는 "오늘 회담의 특별한 결과에 대해 발표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다"면서 "논의된 내용을 워싱턴으로 가져가 우리가 현재 어느 지점에 있으며 어디로 갈 수 있을지를 평가해봐야 한다"고 말했음. 또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너무 나아간 것 같다"고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했음.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회담 종료 직후 중국 외교부를 찾아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회담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25일에는 한국을 방문해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고 26일에는 일본을 방문해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할 계획임. 이어 미국으로 돌아가 정부내에서 회담 내용을 재검토하고 뉴욕 채널을 통해 최종



합의를 위한 조율 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일단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 논의의 동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북미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북미 3차 회담 어떤 진전 있었나>(2/24)

-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3차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대북 영양(식량)지원 등 핵심쟁점에 대해 큰 틀의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북한이 요구한 영양지원 규모 확대 등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고 북측도 UEP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음. 그러나 대북지원에 알곡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북한의 UEP 중단 여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검증하는 문제 등을 놓고 견해차가 있던 것으로 알려져 협상 타결까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4일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이틀째 회담이 끝나고 숙소인 웨스틴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와 인도주의적 사안, 비핵화 등에 대해 진지하고 유용한 (serious and useful) 대화를 했다"며 "(핵심쟁점에 대해) 다소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북핵 외교가에선 북한이 UEP를 중단하고 이에 연동해 미국이 영양지원(24만t 규모)을 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전 공감대를 양측이 재확인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핵심쟁점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접근이 있었고 앞으로 세부내용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임. 영양지원 규모를 30만t으로 확대해달라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 미측은 진정성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을 것이라는 얘기도 현지 외교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음. 북한도 미국의 핵심요구인 UEP 중단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음.
-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유익하고 내실 있었다는 것이 이번 회담에 대한 미측의 평가"라며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 대표단의 태도나 입장에는 극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각론에서는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요구사항인 알곡 지원에 대해서는 미측은 군량미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북측은 미국이 요구하는 영양지원 물량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에 대해 주권 침해라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미는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일단 뉴욕채널을 통한 접촉을 이어가기로 했음.
- 후속회담에 대한 합의는 없었지만 대화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확인한 것도 이번 회담의 성과로 꼽힘. 후속대화에서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영양지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6자회담 재개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될. 현지 외교 소식통은 "이런 핵 문제가 커져 북한 핵 문제의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요구를 동맹국들과 평가해본 뒤 6자회담 재개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도 후계구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 "대북 요구사항 흔들림 없어"(2/24)

-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대북 식량(영양)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이 모니터링 문제 등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과 관련, "첫날 회담에서 이(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됐다"고 확인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 그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영양지원에 대한 요구조건을 명확하게 밝혀왔다"면서 "북한은 이런 질문과 우리가 과거에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답변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잇단 북미대화에서 미국측이 영양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분배 모니터링 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협약이 어렵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북한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됨.
-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글린 데이비스(자료사진)토너 부대변인은 또 최근 미국과 북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진퇴양난(Catch 22)'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대화에서 직면하게 되는 도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측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흔들림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계속 대화를 이어갈 것이고 첫날 일정이 끝났으니 둘째날을 미리 예단하지 말자"면서 구체적인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음.
- 토너 부대변인은 이어 최근 북한의 잇단 대남비방에 언급, "우리가 예전에 제시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이었다"면서 "여러 이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고, (남한과의) 관계개선은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미국측 회담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회담 후 "본질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한 데 대해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회담 중단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中, 훈춘-北원정리 잇는 新두만강대교 건설 계획(2/22)

- 북한 라진항을 이용한 동해 항로를 확보한 중국이 올해 라진항으로 가는 관문인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훈춘(琿春)과 북한의 원정리를 잇는 새로운 두만강대교 건설에 나선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22일 보도했음. 현재의 두만강대교는 1936년 세워진 노후 교량인 데다 폭이 6.6m에 불과해 차량의 교차 운행이 불가능함. 이 때문에 연간 60만을 통관



하는데 그치고 있음. 중국은 2010년 6월 이 다리를 보수했으나 라진항 이용이 본격화되면 늘어나는 교역량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신두만강대교 건설을 검토해왔음.

-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와 원정리를 잇는 새 다리는 기존 다리의 상류 50m 지점에 길이 577m, 폭 25m(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다리가 세워지면 연간 물동량이 지금의 2배 수준인 120만 t으로 늘어나게 됨. 중국은 또 지난해 원정리-라진항 구간 비포장도로를 확장·포장하는 보수공사에 착수, 공사가 마무리 단계임. 대부분 구간의 공사가 끝났고 공사가 어려운 산악지대 일부 구간도 올 상반기 완공됨. 이 도로 정비가 완료되면 중국은 올해부터 훈춘 등 두만강유역에서 생산되는 연간 100만t의 석탄을 라진항을 거쳐 중국 남방으로 운송할 계획임.
- 중국은 2008년 라진항 3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 바다가 없는 두만강유역에서 동해에 진출할 길을 열었으며 최근 4-6호 부두 건설 및 사용권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변주는 또 북·중이 공동 개발키로 한 라선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착공식을 한 중국 아태시멘트의 라선공장도 올해 착공하고, 라선특구 전력 공급망 구축에도 나설 계획임. 연간 100만t을 생산하는 이 시멘트공장이 세워지면 라선특구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중국은 지난해 6월 라선특구 공동 개발 착공식을 하면서 시멘트공장 건설과 라선특구 전력 공급을 약속했음.

● 북·중 과학기술협조위 열려(2/24)

- 북한과 중국의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5차 회의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중국을 방문한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표단과 중국 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의정서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북중간 과학기술협조위 회의가 열린 것은 2010년 12월 이후 1년2개월 만임.

● 北김계관, 中우다웨이 회동...북미회담 설명(2/25)

-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휴일인 25일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났음. 김 부상은 이날 오후 차량을 타고 숙소인 주중 북한 대사관을 나와 중국 외교부 별관 청사에 들어갔음. 김 부상은 이곳에서 우 특별대표를 만나 23~2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디브리핑(사후 설명)하고 이후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 부상은 이날 우 특별대표와 만찬을 함께 한 듯 밤늦은 시간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갔음. 전날에는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외교부를 찾아가 우 특별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이로써 중국은 회담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 모두로부터



이번 회담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음.

- 김 부상은 다음 북한 고려항공 정기편이 있는 28일 귀국길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라. 일·북 관계

● 北, 日정치인 등 60명 초청...北日 해빙 무드(2/20)

- 북한이 고(故)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정치인 등 일본 인사 60명을 초청했다고 NHK 방송이 20일 보도했음. 이 방송에 의하면 북한 지도부는 오는 4월 15일의 김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일본의 전 국회의원과 연구자, 민간단체 인사 등 약 60명을 초청했음. 초청받은 인사는 북한과 관계가 깊은 인물들이며, 이들은 4월 15일을 포함해 약 10일 정도 북한을 방문하기로 하고 준비 중임. 북한 지도부 내에서는 일본 인사 초청에 신중한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초청하기로 했다고 NHK가 전했다. NHK는 "북한 지도부가 일본 인사를 초청한 것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냉각돼 있으나, 북한 정권으로서 중요한 시기를 맞아 교류와 정치적 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로 삼으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한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작년 11월 북한 측과 극비리에 접촉해 2차 세계대전 전후의 혼란기에 북한에 남아있다가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 수습과 매장지 정비와 관련한 협의를 제안했으며, 북한 측으로부터 부정적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음. 이 통신은 북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북한의 조선노동당 간부와 외국에서 접촉했으며, 이는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몰자 등의 유골 수습과 위령 사업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일본 측으로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 재개를 시야에 넣고,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 관계의 국면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의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음.
- 북한 잔류 일본인의 유골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인 약 3만5천 명이 귀국하지 못하고 북한에 남아있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일본은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전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이 작년 7월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와 극비 접촉을 시작했고, 올해 1월에도 중국에서 회동하는 등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과 유골 반환, 국교정상화 문제, 북송 일본인 처 귀국 문제 등을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마. 중·북 관계

● 北철도전문가 33명, 러시아서 연수(2/21)

- 북한의 철도 관련 전문가 33명이 러시아의 철도 전문기관에서 7주간 연수함. 21일 러시아 극동철도(FER)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북한과 러시아



가 공동 추진 중인 라진-하산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와 연계해 진행됨. 연수 참가자 중 24명은 블라디보스토크 북쪽에 있는 우수리스크 연수원에서, 나머지는 러시아 극동기술대(FESTU) 프리모르스키 분교에서 각각 7주간 철도 관련 전문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 북한과 러시아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83억 루블(약 3천500억 원) 규모의 라진-하산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라진-하산 52km 구간의 낡은 선로와 역사 등 기반시설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북한 라진항에 화물 터미널을 건립하는 내용임. 지난해 10월에는 시범열차 운행을 마쳤음. 러시아는 라진항에 화물 터미널이 건립되고, 라진-하산 철도를 통해 러시아 철도망과 연결되면 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본격적인 환적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바. 기 타

● 제주 WCC에 북한 초청.. "통일부와 협력"(2/20)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조직위원회'가 오는 9월 6~15일 제주에서 열리는 행사에 북한을 초청해 참가 여부가 주목됨. 이흥구 조직위원장은 20일 제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북한도 WCC를 주관하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국"이라며 조직위와 IUCN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뜻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음. WCC에 북한을 초청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그는 제주는 북한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북한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통일부와 이 문제를 놓고 협력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음. 이 조직위원장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60여 년 동안 완전하게 생태가 보전된 곳은 전 세계에서 DMZ가 유일해 총회 의제에 포함될 만큼 세계의 관심이 비무장지대(DMZ)에 쏠려 있다며 제주 WCC에서 DMZ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임을 예고했음. 간담회에 동석한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도에서 그동안 북한에 감귤을 많이 보냈다면서 북한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직위에 협조를 요청했음.
- 조직위 김종천 사무처장은 IUCN 64년 역사에 주최국의 이름을 붙인 선언문(제주선언문)이 채택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제주 총회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음. 그는 선언문에는 한국의 모범적인 녹색성장 사례뿐만 아니라 제주를 세계 환경 허브로 만들 수 있는 비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직위원장은 제주에서 19일 열린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D-200일 기념행사'와 20일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삼다수 후원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에 왔음. 제주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에는 180여 국가에서 1천100여개 정부기관·비정부기구 관계자 1만 여명이 참가할 예정임.
-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자연보전 분야의 세계 최대 단체인 IUCN이 자연



보전과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여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환경올림픽'이라고도 불림.

● 유엔 北인권보고관 "탈북자 강제송환해선 안 돼"(2/23)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주변국가들에 대해 탈북자를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전했다. 다루스만이 언급한 주변국가는 사실상 중국을 지칭한 것임. 방송에 따르면 다루스만은 지난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서 많은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으며 송환된 이들은 강제노동과 고문, 연좌제, 관리소 수감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증언들이 있다고 밝혔다.
- 또 한국 외교관과 민간단체 관계자를 통해 지난해 북·중 국경경비가 더욱 강화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북한의 이웃나라들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농 르폴르망 원칙'을 존중해 모든 탈북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농 르폴르망 원칙'은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난민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임.
- 다루스만은 지난해 총 7척의 선박을 통해 47명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는 다음달 12일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회의에서 논의됨. 다루스만은 작년 8월에도 유엔총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서 북한 주변국가들에 대해 탈북자 지원과 보호를 촉구한 바 있음. 그는 당시 보고서에서 "제3국 현지인과 결혼한 탈북여성과 자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국들이 이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약자, 정치범에 대한 석방을 북한에 권고하기도 했음. 다루스만의 이번 보고서는 작년 처럼 중국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표현 수위는 더욱 높아진 셈임.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직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전신) 북한인권결의로 신설됐으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총 6년에 한해 매년 임무의 연장 여부가 결정됨. 다루스만은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 6월부터 비릿 문타폰 보고관 후임으로 활동하고 있음.

● "WFP, 대북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 내달 종료"(2/23)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긴급식량 지원을 다음 달 종료하고 4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음. 방송에 따르면 WFP는 지난해 4월부터 북한주민 35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식량지원'을 예정대로 다음달 종료하고 4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할 영양지원사업을 할 예정임.
- WFP는 2010년 7월부터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 250만 명에 대한 영양지원사업을 해왔지만,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작년 2월 북한의 식량상황을 조사한 유엔 전문가들이 610만 명이 굶주릴 수 있다고 평가함에 따라



두 달 뒤 지원대상을 350만 명으로 확대하는 긴급식량지원사업을 발표했음.

- 한편 캐나다 정부가 개별국가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390만 달러를 WFP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전했다.

● 27일부터 키리졸브훈련 돌입.. 대북감시 강화(2/26)

- 한국과 미국은 27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연합훈련에 대비해 대북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했다고 군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군은 내달 9일까지 진행되는 훈련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최전방지역의 대포병레이더, RF-4 정찰기, U-2 고공전략정찰기 등 대북 감시자산을 총가동하고, 공군 F-15K 등 초계전력을 비상대기토록 했음. 군사분계선(MDL)지역에서의 도발에 대비, K-9 자주포 등 전방사단에 배치된 화력장비도 즉각 응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훈련은 유사시 한반도를 방어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정기적인 훈련으로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800여명을 포함한 미군 2천100여명과 한국군 20만 여명이 참가해 예년 수준으로 진행됨. 한미 야외 전술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도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됨. 독수리연습에는 미군 1만1천 여명(외국주둔 미군 1만500명 포함)과 사단급 이하 한국군 부대가 참가해 지상 기동과 공중·해상·원정·특수작전 훈련을 함.
- 북한군도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 서부지역 4군단 등 최전방부대에 경계근무 강화 태세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특히 북한군은 최근 강화도 등 남측지역을 겨냥한 연습포탄 사격훈련을 강화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2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연합훈련 계획을 비난한 뒤 "민족반역의 무리들과 내외 호전광을 매장하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인민군 최고사령관도 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연평도와 백령도 전방에 있는 688군부대, 493군부대를 각각 시찰하고 우리 해병부대에 배치된 전력현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데이비스 25일 방한..임성남과 면담(2/20)

-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한 뒤 25일 방한한다고 외교통상부가 20일 밝혔다. 데이비스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북미회담 결



과를 디브리핑(사후설명)한 뒤 향후 6자 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데이비스 대표와 임 본부장은 면담 뒤 공동 브리핑도 할 예정이다.

- 앞서 북미는 북한 김일성 국방위원장 사망 후 처음으로 23일 베이징에서 북핵 문제를 의제로 한 고위급 대화를 가짐. 이 회담을 위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 북한측 대표단은 21일 베이징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됨. 평양과 베이징간 고려항공은 매주 화, 목, 토요일에만 운행되고 있음. 미국측 대표단은 22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며 북미 양측은 같은 날 실무자간 사전접촉을 하고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형식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전망됨.
- 외교가에서는 데이비스 대표와 임 본부장이 공동 브리핑을 예고한 것을 이유로 이번 북미대화에서 모종의 합의가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옴.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회담 결과는 해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며 현재로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데이비스 대표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 중국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도 만날 예정이다. 또 방한 후에는 일본을 찾아 일본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의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 F-15K 핵심부품 조달 美보잉에서 전담(2/20)

- 앞으로는 F-15K 전투기의 핵심부품 조달 절차를 미국 보잉사에서 전담하게 됨. 방위사업청은 오는 22일 보잉사와 F-15K 성과기반 군수지원제도(PBL)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일종의 외주계약 형태인 'PBL'은 전투기 가동률과 같은 성과지표를 놓고 업체가 이를 초과 달성하면 가산금을, 미달하면 벌금을 부여하는 군수지원제도임. 정부는 5년간 수리부속품 보급 지연으로 인한 비행 불가능상태(NMCS) 7% 이내를 유지하는 대가로 보잉 측에 3천250억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음. 또 성과 지표에 미달하면 계약금액의 최대 4% 벌금을 물리기로 했음.
- 기존에는 공군이 F-15K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작사인 보잉에서 부품을 구입해 자체 정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음. 부품 조달에 평균 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신예 전투기인 F-15K의 가동률이 85%내외에 머무는 등 부품확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음. 방사청 관계자는 "부품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F-15K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이견 좁혀"(2/21)

- 정부 당국자는 21일 미국과 진행중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협정문 중 일반적인 조항 개정 문제에 대한 양측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핵연료 처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처리)의 절차와 방식,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동의권



을 행사하는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측과 비공개로 만나 우리측 안을 전달했다"면서 "미측은 추가적 검토를 거쳐 수정안을 전달기로 했음. 현재 문안 조율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 이어 미국이 베트남, 요르단 등과의 원자력협정에서 이들 국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면서 "미국의 통제권을 전제로 (재처리를) 인정해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자력협정은 관련 장비를 제공하는 공급 국가와 수령국간 물자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담는 것"이라면서 "이 협정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상의 평화적인 핵이용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은 오는 2014년 만료되기 때문에 이전에 연장 또는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임.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이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이 쟁점임.

● 한·미 FTA 3월15일 0시 발효(종합)(2/21)

-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관세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0시 공식 발효됨. 2006년 6월 협상개시 5년8개월만,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10개월만임. 미국과의 FTA는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또 정치·사회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 적잖게 이바지를 할 전망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양국은 2시간 전인 오후 6시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고 발효일을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발효날짜를 3월15일로 잡은 것은 업체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이로써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3대륙을 잇는 세계 경제의 60.9%가 우리의 무역영토에 포함된 것임.
- 박 본부장은 "그동안 FTA 이행 준비점검 회의는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조치를 상호 확인하는 회의였지만 협정문과 법령이 방대해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협정문이나 개정된 법률, 규정은 하나도 고쳐진 게 없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뒤 3개월간 화상회의, 대면회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양국 법률안 등의 발효준비 작업을 벌여왔음. 하지만 한·미 FTA 발효시기는 애초 정부가 밝힌 목표 일자(2012년 1월1일)보다 3개월 보름 늦은 것임.



- 그는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있었던 투자자-소송제도(ISD) 문제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미국과 성실히 입장을 정리해 협상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선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의 유럽 수출이 타격받는 상황에서 한·미 FTA 발효로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음. 석유화학,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 수출이 늘게 되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는 기대도 감추지 않았음.
- 두 나라 정부는 협정 발효 전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임.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발효 전까지 취하고 미국은 대통령 포고문 공포 및 관련규정 도입을 추진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작년 8월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는 발효 후 10년간 국내 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음.
-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FTA 발효는 작년 발효된 한·유럽연합(EU) FTA와 더불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FTA 허브(Hub) 전략의 중요한 축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됨. 정부는 협정발효 후 기업들이 한·미 FTA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행정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동시에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한미, 22일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협의(2/22)

- 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대이란제재 조정관 등과 만나 한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문제 등을 협의함. 정부 소식통은 "미국 측이 한국과 이란간 비석유 이란교역 문제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이란제재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협의에서는 석유부문 수입감축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음.
- 정부는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을 제재하기 위한 미국의 국방수권법 이행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미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음. 이 소식통은 "구체적인 감축폭까지 합의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큰 로드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그는 또 한국의 이란산 원유수입을 감축하게 되더라도 미국 행정부의 구체적인 국방수권법 이행결정이 내려지는 3월30일 이후에 감축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음.
- 한국 대표단은 이 국장외에 은성수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 우태희 지경부 주러시장협력관 등이 참여하고 있음. 앞서 미국 측은 지난달 16~18일 이란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아인혼 조정관과 대니



얼 그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했음.

나. 한·중 관계

● 中, 서해사격훈련에 우회적 거부감 표시(2/20)

- 중국 정부가 20일 한국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우회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했음.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관련된 각 측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도록 행동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한다"고도 했음.
-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군이 서북도서에서 사격훈련을 했고 그와 관련해 북한 측이 자국에 대한 침범으로 간주하겠다고 한데 대해 중국의 입장이 뭐냐고 묻자 그같이 답했음. 그의 이런 언급은 한국 측의 사격훈련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됨.
-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백령도와 연평도 등의 서북도서 지역의 해병대 해상사격훈련이 실시됐으나 우려됐던 북한의 도발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 <韓中 외교가, 탈북자 문제로 긴장 고조>(2/22)

- 탈북자 문제로 한국과 중국 외교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한국은 탈북자를 인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중국 역시 '강공'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임. 일단 한국의 공세가 이전과 달리 '강하고 지속적'이라는 점이 두드러짐. 한국은 그동안 가능하다면 탈북자 문제는 조용하게 처리해왔음. 그러나 근래 중국 관련 채널에 국제난민 협약 준수를 거론한 데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할 의지도 비치고 나섰음.
- 실제 이달 말로 예정된 스위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국제협약상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들어 중국을 직접 겨냥할 수도 있다는 심산임. 하지만 아직 '결행'을 하기로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정식 제기하게 되면 결국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임. 자칫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
-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국제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함에 따라 외교 실무진의 대중 압박 강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실제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탈북자를 인도적으로 처리하라며 압박 외교를 펴고 있



음. 우리 정부는 아울러 이달 중 중국 외교부의 뤼자오휘이(羅照輝) 아주국장의 방한과 내달 초 열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탈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임. 이번 기회에 탈북자 정책에 대한 중국 입장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도 비침.

- 그러나 중국 정부의 태도는 이전과 비교할 때 변화가 거의 없어 보임.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북중 국경을 넘은 불법 월경자는 있어도 난민은 없다고 못박았음. 다시 말해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를 거쳐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임. 한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해 인도주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됐음. 사실 중국 당국은 가능한 한 말을 아껴왔던 한국 정부가 직접 난민협약을 거론하며 탈북자의 강제 북송 중단 요구를 한데 대해 놀라워하면서도 기존 원칙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임.
- 중국 당국은 탈북자에 대해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함. 그러면서 난민 지위 부여는 중국의 '권리'인데 왜 한국이 관여하느냐고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는 것임. 중국에서 탈북자 문제는 '당(黨) 대 당(黨)' 관계가 우선인 북중 특수관계에 비춰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주관 부서이고 국무원 산하 외교부 역시 연관돼 있음.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군과 공안당국이 체포한 탈북자들을 기본적으로 북송 처리하면서도 치외법권 지역인 중국 내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진입했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한국을 포함한 제3국 송환을 허가해왔다는 게 정설임.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에 한중 정부 차원의 탈북자 공방은 이미 사안이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 당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포해 억류 중인 탈북자 수십 명은 결국 강제 북송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옴. 이 때문에 한국의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정치권과 더불어 탈북자 문제를 공론화하는 바람에 결국 실리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탈북자 문제는 한국과 중국 모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양국 간에 한동안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음.

● 한중, 연쇄 접촉..탈북자 문제 가닥 주목(2/22)

- 한국과 중국이 향후 한 달 여동안 실무 협의에서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연쇄 접촉을 벌일 예정이어서 최근 현안으로 급부상한 중국 내 탈북자의 신병처리 문제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 지 주목됨. 22일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외교부 동북아국장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중국측과 협의 중임.
-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외교부 조세영 동북아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뤼자오휘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회담을 가졌음. 이번에는 뤼 국장 등 중국측 인사가 방한할 것으로 전망됨. 이어 빠르면 다음 달 2일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음. 이를 위해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진簾>) 외교부장이 1년여 만에 방한해 김성환 외교부장관을 만남.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불통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임. 김 위원장 사망 전에는 중국 어선 선장의 해경 살해 문제로 양국 외교부간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음. 당시 일각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됐었음.

- 매년 개최되는 5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가 내달 중 방중해 한·중·일 차관보급 실무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 때 한중 정상간 양자 회동도 추진되고 있음. 중국 측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참석할 예정임.
- 외교가에서는 이런 연쇄접촉에서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외교 갈등이 증폭될지, 아니면 진정될지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우리 정부의 난민협약 등 국제조약 준수 요구에 대해 중국이 "탈북자는 불법 월경자"라고 반발하는 점을 볼 때 잇 단 양자협에서 양국간 갈등이 격화, 정면 충돌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경제협력 등 양국간 관계를 고려해 한중 양국이 발언 수위를 적절히 조절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한중이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면 할수록 양국 모두 문제해결을 위한 입지가 작아진다는 점도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임.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 볼 때 탈북자 문제가 논의 안 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어떤 수위로 문제제기를 할지 등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中외교부, '탈북자 9명 강제복송' 답변 거부(2/24)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4일 최근 탈북자 9명의 강제 복송 여부에 대해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음.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한 타협을 거쳐 해당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그는 그러면서 "그런 원칙이 각 측의 공동이익에 들어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떤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월경지를 복송했느냐는 물음에도 "중국은 지금까지 원칙을 지켜왔다"고만 답했음.
-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말한 바로는 북중 접경지역인 룡징(龍井) 변방부대에 갇혀 있던 탈북자 9명이 투먼(圖們)을 통해 북한에 넘겨져 온성 보위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번 탈북자 복송은 우리 정부가 탈북자 복송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사고 있음.

다. 한·일 관계

● 시민단체 "'다케시마의 날' 日 항의방문"(2/20)



- 독도수호전국연대는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22일 주관하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시주로 시마네 현이 주관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저지하고 역사 왜곡 시정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익 의장 등 이 단체 관계자 3명은 21일 인천공항으로 출국, 일본에 도착해 22일 시마네현민회관 앞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 독도수호전국연대가 일본에 항의방문단을 보내는 것은 올해가 8번째임.

● 日 시마네현, 독도 전담부서 설치 요구(2/22)

-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시마네(島根)현이 정부에 독도 전담 부서 설치를 요구했음. 22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시마네현 오키(隱岐)섬의 마쓰다 가쓰히사(松田和久) 정장 등은 전날 총리 관저를 방문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에게 독도의 소관조직을 정부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음. 마쓰다 정장 등은 정부 차원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 제정도 요청했음. 후지무라 장관은 이에 대해 "향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음.
- 한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이 22일 주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 등 정부 관계자를 참석시키지 않기로 했음. 후지무라 장관은 이와 관련 "국회 일정 등이 이유이며, 한국을 외교적으로 배려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음.
-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여야 의원 16명(대리인 포함)이 시마네현의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음. 제1야당인 자민당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청년국장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조직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하기로 했음.

라. 미·중 관계

● 中 매체들, 시진핑 방미성과 부각에 주력(2/20)

- 중국 매체들이 20일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미국 방문 성과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음. 시 부주석의 13~17일 닷새간 방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양국 관계 진전은 물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게 요지임.
-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중문과 영문 기사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 들어간簾>) 외교부장이 밝힌 시 부주석의 방미 결과 설명을 자세하게 실었음. 양 부장은 미중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의 첫 걸음이었다던 리처드 닉슨 전 미국대통령의 중국 방문 40주년에 시 부주석의 방미가 이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음. 그는 그러면서 시 부주석이 워싱턴, 아이오와주 머스



카틴, 로스앤젤레스 등을 돌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인사와 의회 지도자, 그리고 27년 전 공산당 초급 간부 시절에 방미했을 때 만났던 머스카틴 친구들과 재회하는 등 27개의 공식행사를 소화했다고 소개했음. 양 부장은 시 부주석이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측의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면서 서로 이해를 깊게 하고 신뢰를 돈독히 하면서 협력과 우정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 가장 큰 성과로 양측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증진하기로 합의한 점을 꼽았음. 양 부장은 특히 시 부주석의 이번 방미가 중미 양국이 공동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시했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음.
-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시진핑 방미 결과 기사를 게재하면서 성과를 두드러지게 하는 데 주력했음.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양 부장의 시 부주석 방미로 중미 양국이 서로 협력해 '윈-윈(Win-win)' 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중국중앙(CC)TV 등을 포함한 관영 매체들은 시 부주석이 방미 기간에 오바마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대담하고 머스카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정담을 나누는 모습을 부각시켜 보도해 눈길을 끌었음.

● 中 "美와 군사관계 발전시킬 준비됐다"(2/24)

- 중국 국방부의 정연성(耿雁生) 대변인은 24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과 건강하고 안정적인 군사관계를 발전시켜갈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정 대변인은 월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관계 확대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 새 중미 양국에 여러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군사적 협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상대국의 핵심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며 쟁점이 되는 이슈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높이면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군사관계를 발전시키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상호 존중, 신뢰, 평등,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음. 정 대변인은 아울러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미국 방문에서 양국 군 관계자 간에 교류가 있었고 이는 앞으로 군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음.
- 그는 그러면서 인민해방군 산하 해군이 서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례적인 것으로 특정국가를 공격할 목적의 훈련이 아니라면서 일각의 대만 겨냥설을 부인했음. 그는 중국 해군 증강설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며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 무기와 장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국가방위 수요와 경제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군사력 증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어느 나라와도 군비경쟁을 할 의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오는 2015년의 국방예산 지출이 2천382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미국의 경제조사기관 IHS 글로벌 인사이트



보고서에 "그런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음.

- 경 대변인은 또 중국은 인도, 일본과 함께 국제 해상 안보 분야의 협력을 하고 싶다고 밝혔음. 중국 국방부는 자국의 일부 관영매체를 상대로 매월 기자회견을 연. 이런 가운데 중국의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은 23일 게리 로크 주중 미국 대사와 만나 중미 양국이 긴밀한 군사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량 부장은 "양국 간 원활한 군사관계가 전략적 상호 신뢰와 안보이익 수호에 매우 중요하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를 위기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음.

마. 미·일 관계

● "日, 이란 제재법서 예외 인정받아" <日紙> (2/21)

-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법 적용 대상에서 일본이 제외될 전망이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의 이란 제재법과 관련, 일본이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연간 11% 이상 감축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고 미국이 이를 대체로 수용했음.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 대금 결제 등을 수행하는 일본의 금융기관이 미국의 이란 제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일본은 지난주 열린 실무자협약에서 이런 내용에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이달 중 정식 합의할 전망이다. 일본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등으로 화력발전을 위한 원유 수요가 증가해 미국 측에 이란 제재법의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해왔음. 미 의회 내에서는 일본이 이란산 원유 수입 삭감 폭을 18%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미국이 삭감 폭의 상향을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있음.

● "日, 미국에 'LNG 수출하라' 요구" <日紙> (2/22)

- 일본이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줄이는 대신 미국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일본에 수출하도록 요구해 교섭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미국에 LNG의 수출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오는 5월로 예정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미국 방문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으로 화력발전 연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로 원유 수입을 줄일 경우 예상되는 에너지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
- 미국은 국내 가스 가격 상승을 우려해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LNG 수출을 규제하고 있음. 일본은 미국 루이지애나와 메릴랜드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 LNG 생산 프로젝트를 통한 수입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의 화력발전을 위한 LNG 소비량은 작년엔 5천300만t으로 전년보다 1천700만t 급증했음.



● "日, 美 F35기 가격 올리면 도입 중단" <日紙> (2/22)

- 일본 정부가 최신에 스텔스 전투기인 F35기 도입과 관련, 가격을 올리면 도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미국 국방부에 F35기의 가격을 올리지 말 것과 생산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문서로 약속하여 달라고 요구했음. 이는 F35기의 개발이 늦어지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F35기 도입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 대량 생산의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서 일본에 인도할 F35기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임. 하지만 미국 정부는 최신에 전투기의 공급을 가격이나 납기의 변경에 책임을 지지 않는 '유상 원조'라는 이유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
-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항공자위대의 F4 전투기 후속 기종으로 F35기를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42기를 도입하기로 했음. 우선 2017년 3월까지 4기를 도입하기로 했고, 같은 해 12월까지 일본 국내에서 조립한 4기를 도입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한 상태임. 미국은 2013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서 F35기의 대당 가격(견적액)을 1억5천300만 달러로 계상했음. 이는 일본이 애초 예상했던 대당 6천500만 달러에 비해 2.4배 정도 높은 가격임.

● 日 법원, 美군속 공무중 범죄에 첫 실형 판결(2/23)

- 주일미군 민간인 직원(군속)이 공무 중에 일으킨 범죄라도 미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일본이 기소할 수 있도록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 운용방침이 바뀐 이후 첫 실형 판결이 나왔음. 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키나와(沖縄) 나하(那覇)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2일 귀가 도중에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자동차운전 과실치사)로 기소된 주일 미공군 군속 러퍼스 램지(RUFUS RAMSEY·24) 피고인에 대해 금고 1년6월의 실형 판결을 내렸음. 스즈키 히데유키(鈴木秀行) 재판장은 "직접 사죄를 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의) 모친이 엄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군 내부적으로 피고인의 면허를 취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음.
- 램지 피고인은 지난해 1월12일 오키나와현 나하시 국도에서 다른 차를 추월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요기 고키(興儀功貴) 사망 당시 19회사원씨가 운전하던 차를 들이받아 요기씨를 숨지게 했음. 램지 피고인은 당시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매점 점원이었음.
- 이전에는 미군이 발행한 '공무증명서'를 갖고 있으면 일본측은 범죄를 일으킨 미군 군속을 기소할 수 없었지만, 미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측이 형사 기소하지 않으면 일본측이 재판에 부칠 수 있도록 SOFA 운용방침을 바꾸기로 합의했음. 이는 미국 법원이 1960년 '군속을 평상시 군법회의에 넘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뒤 미국측 일반 법정인 없는 주일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미군 군속은 어디서도 재판을 받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미일 양국은 후텐마(普天間) 미 해병대 기지 이전 문제로 악화된 오키나와 주민들의 대미 감정을 달래는 차원에서 SOFA 운용방침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 중·일 관계

● 中, 日에 분쟁해역 해양조사 중단 요구(2/20)

- 중국은 일본에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는 해역에서의 해양조사 중단을 요구했음. 20일 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의 선박이 19일 밤 오키나와(沖繩)현 구메지마(久米島) 해역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양조사 중이던 일본 해상보안청의 측량선에 접근했음. 중국 국가해양국 선박은 일본 측량선에 "이 해역은 중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해역임. 조사를 중단하라"고 무선으로 요구했음. 하지만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정당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뒤 조사활동을 계속했음.
- 해상보안청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활동을 하던 측량선이 중국 정부의 선박으로부터 조사 중단을 요구받은 것이 재작년 5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라며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항의했다고 밝혔음.

● 日나고야 시장 "난징학살 없었다" 망언에 中 발끈(2/21)

- 일본 나고야(名古屋)시의 가와무라 다카시 시장이 일본군에 의한 난징학살은 없었다고 망언을 하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21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가와무라 시장은 전날 시청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의 난징시 위원회 간부 등에게 2차 세계대전 중의 일본군 행위와 관련 "통상적인 전투행위는 있었지만, 난징에서의 (대학살) 사건은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진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토론회를 난징에서 열고 싶다"고도 했음.
- 가와무라 시장의 발언을 접한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음.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정례회견에서 "(가와무라 시장의 견해) 동의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표시했음. 그는 "난징 대학살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음. 일본 공직자들이 역사적 교훈을 잘 헤아려 양국 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진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부핑(步平) 근대사 연구소장은 "난징대학살과 관련해 일본은 중일 공동연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난징대학살은 중일 역사 공동연구에서 일본 연구자들도 인정한 역사적 사실임. 2010년 정리된 양측의 연구결과에서 중국 측은 사망자를 30만 명 이상이라고 본 반면 일본 측은 '20만 명이 상한이며, 2만~4만 명'이라는 추계도 있다고 주장했다. 난징대학살은 193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당시 중국 수도 난징으로 진격하던 일본군이 난징과 그 주변에



서 중국인을 집단 살해하고 부녀자 성폭행, 약탈, 방화 등을 저지른 사건임. 하지만 일본의 대표적 우익 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 지사도 난징대학살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등 우익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中·日, 난징학살·동중국해 갈등 고조〉(2/22)

- 난징(南京)학살 망언과 동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중일 관계가 한동안 '화색'이 도는 듯했으나 역사와 영해 분쟁이 두드러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임.
- 중국은 무엇보다 일본 나고야(名古屋)시의 가와무라 다카시 시장이 난징학살은 없었다고 부인한 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음. 가와무라 시장은 지난 20일 나고야 시청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의 난징시 위원회 간부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군 행위와 관련해 "통상적인 전투행위는 있었지만, 난징에서의 (대학살) 사건은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언급했고 이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가와무라 시장의 발언에 "공분"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음. 통신은 일본의 지도층이라고 할 나고야 시장 지위에 있는 고위 공무원이 그 같은 발언을 한 데 주목하고 있음. 역사인식의 부재에 탄식을 쏟아냈음. 통신은 일본군이 1937년 12월 13일 시작해 6주 동안의 난징 침략에서 강간·약탈·방화·살인 등의 형언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30만 명의 무고한 중국 민중을 학살한 역사를 부인한 나고야 시장의 발언에 개탄한다고 보도했음.
- 앞서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난징 대학살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음. 일본 공직자들이 역사적 교훈을 잘 헤아려 양국 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진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급기야 난징시는 같은 날 밤 시 대변인을 통해 가와무라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나고야시와 공식적인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시 대변인은 "가와무라 시장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난징 시민의 감정을 심하게 상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 이런 가운데 동중국해 영해 분쟁이 재연되고 있음. 일본 정부가 지난 19일 밤 오키나와(沖縄)현 구메지마(久米島) 해역의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양조사 중이던 해상보안청 측량선에 중국 순찰함이 접근해 퇴거명령을 했다고 밝히자 중국도 '접촉'을 확인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22일 중국 국가해양국은 산하 동해총대 소속의 순찰함 두 척이 당일 자국 해역에서 불법적인 조사활동을 하던 일본 측의 측량선에 접근해 영해 침범을 알리고 나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음. 국가해양국은 해당 해역이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관할 해역으로 일본 측량선의 진입은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도 홍레이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동중국해 분쟁해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거듭었음.
- 중일 양국은 작년 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고질적인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들어지는' 분위기가 역력함. 앞서 중국 외교부는 근래 일본 정부가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부근 무인도에 일본식 이름을 붙이려고 한 데 대해 불법적일뿐더러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음. 그러나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강화 전략을 펴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은 가능하면 일본과 '좋은' 관계를 모색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일 갈등이 어느 정도 선에서 '관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 中외교부, '난징 망언' 日나고야와 교류중단 지지(2/22)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2일 난징(南京)학살 망언 대응 차원에서 난징시가 일본 나고야(名古屋)시와 일시적 교류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 이해와 더불어 지지를 표시한다고 밝혔음.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이 난징학살의 존재를 부인한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미 엄중한 태도 표명과 함께 교섭을 요청했다면서 중국은 관련 사건의 추이에 깊은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면서 "올해는 중일 외교 정상화 40주년으로 양국 국민 간에 교류가 많은 중요한 해"라면서 "중국은 일본 측이 양국 간에 합의된 4대 원칙을 지키기를 바라며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로 가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음. 홍 대변인은 "중일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과 양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앞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난징 대학살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음. 일본 공직자들이 역사적 교훈을 잘 헤아려 양국 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진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와무라 시장은 지난 20일 나고야 시청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의 난징시 위원회 간부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군 행위와 관련해 "통상적인 전투행위는 있었지만, 난징에서의 (대학살) 사건은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말해 공분을 샀음.

● 中, 日에 난징학살 망언 항의 공세 계속(2/23)

- 중국 정부가 가와무라 다카시 일본 나고야(名古屋)시장의 난징(南京)학살 망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음. 중국 외교부의 뤼자오후이(羅照輝) 아주사(司·국에 해당) 사장은 22일 중국을 방문 중인 스키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음.
- 뤼 사장은 "나고야 시장의 역사를 왜곡한 무책임한 발언으로 중국 인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난징학살은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잔혹한 범죄이며 여기에는 논쟁할 여지가 없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뤼 사장은 이어 "일본 측이 역사를 거울삼아 중국과 일본이 체결한 4대 정치 원칙에 따라 일본의 중국 침략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다뤄야 한다"고



- 역설했음. 이에 스기야마 국장은 나고야 시장의 발언은 사건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난징학살의 존재를 부인하는 나고야 시장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인민일보는 이어 문제의 발언이 '무지(無知)'에서 나온 것이라고 규정했음. 이런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누리꾼을 중심으로 난징학살 망언을 한 나고야 시장을 응징하기 위해 나고야 여행을 하지 말자는 운동을 펴고 있음. 중국 난징시와 일본 나고야시는 1978년부터 자매결연을 해 시 차원의 교류도 많을뿐더러 서로 관광객이 붐빈다는 지적임.
 - 앞서 22일 난징시가 난징학살 망언을 문제 삼아 나고야 시와의 일시적 교류 중단을 선언했으며 같은 날 중국 외교부는 그런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음.

● 中, 나고야 시장 망언에 경제보복 움직임(2/24)

- 일본 나고야(名古屋) 시장이 난징 학살을 부정한 망언의 불똥이 경제 쪽으로 옮겨붙을 조짐임. 24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중국 여행업체가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의 '난징 학살은 없었다'는 지난 20일 발언을 문제삼아 일본 투어를 중단하거나 방문지를 변경하는 등의 보복에 나섰다. 충칭의 한 여행사는 23일부터 일본 투어의 모집과 비자 발급 수속을 중단했음. 이 여행사는 이미 돈을 지불하고 여행을 신청한 고객에게 여행비를 반환하는 한편 향후 일본 관광 대신 태국 등 다른 국가로 여행지를 변경하기로 했음. 산시성 시안의 한 여행사는 모든 일본 투어에서 나고야 관광을 빼고 숙박 예약도 취소하기로 했음. 상하이의 한 여행사는 "고객들에게 나고야 관광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난징학살의 존재를 부인하는 나고야 시장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가와무라 시장의 사죄를 요구하는 한편 "중국의 모든 일본 투어가 나고야를 우회하는 것을 제언한다"면서 "나고야와의 경제협력을 줄이는 것도 좋다"고 노골적으로 보복을 호소했음. 가와무라의 망언으로 1978년 이후 34년간 지속된 나고야시와 난징시의 우호관계도 단절됐음. 난징시는 당분간 나고야시와 모든 교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음.
- 나고야시가 속한 아이치(愛知)현의 경제계는 가와무라 시장의 망언으로 기업활동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난징시가 속한 장쑤성에는 아이치현 기업 100개사 이상이 진출해 있음. 일본 정부는 파문이 확대되자 가와무라 시장의 발언은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가와무라 시장은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해 중국을 자극했음. 가와무라 시장은 23일 기자들에게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서 "수십만 명의 학살은 없었다고 지금까지 말해왔음. 뒤에서 말하는 것보다 정정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그는 지난 20일 나고야 시청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의 난징시 위원회 간



부들에게 2차 세계대전 중의 일본군 행위와 관련 "통상적인 전투행위는 있었지만, 난징에서의 (대학살) 사건은 없었던 것이 아니냐. 목격자가 없다"고 말했다.

사. 중·러 관계

● "러-中, 시리아 사태 공통 입장 확인"(2/23)

-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 수장이 23일 전화통화를 하고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입장을 확인했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언론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보도문은 이날 러시아 측의 요청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양제즈(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이 전화통화를 했으며 "양측은 모든 형태의 시리아 내 폭력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시리아 정부와 야권이 외국의 간섭을 배제한 채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대화에 착수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공통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보도문은 이어 양국 장관이 이러한 목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별도의 공보실 명의 논평을 통해 유엔이 시리아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러시아는 유엔 사무총장이 인도주의 문제 담당 차장인 B. 아모스를 시리아로 급파하기로 결정한 것을 지지한다"며 "반기문 총장의 이런 행보는 러시아의 제안과 맥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는 시리아 내 인도주의적 상황 평가와 관계자들과의 인도주의적 지원물자의 안전한 공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유엔 총장 특사를 시리아로 파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음.

아. 기 타

● 中, 탈북자 처리 원칙 불변 강조(2/20)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0일 탈북자의 강제 복송 중단 요구와 관련해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탈북자의 강제 복송은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국제난민협약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화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홍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과거와 비교할 때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앞서 지난 19일 외교통상부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자들의 강제 복송 가능성을 우려하고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의 협약 준수를 촉구했음. 난민협약은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



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음.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최근 탈북자 수십 명이 중국 공안 당국에 붙잡혀 송환 위기에 있다면서 북송 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중국 당국은 탈북자 체포 여부를 확인조차 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앰네스티, 中대사에 "北주민 북송 말라" 요청(2/20)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일 오후 주한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장신썬 대사 앞으로 '중국 북동부 창춘(長春)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북한 주민 21명을 강제북송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과 집단 SMS 탄원을 전달했음.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오후까지 5천521명이 SMS 문자 탄원에 참여했으며 9천163명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탄원 메일을 전달했다고 전했음. 국제앰네스티 지부는 "북한 주민들이 송환되면 박해와 고문, 강제노동, 사형의 위협에 처할 것이 우려됨. 국제법에서도 이런 상황에서의 강제송환을 금하고 있다"며 "이들의 한국행을 허용하거나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비호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음.
- 지부는 지난 17일 중국대사관으로 팩스를 보내 대사 면담을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음.

● 中외교부, 탈북자는 난민 아닌 "불법 월경자"(2/21)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1일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요구에 대해 "관련 인원들은 경제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이른바 불법 월경자"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언급했음. 그는 따라서 "해당 월경자들은 난민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뿐더러 유엔 시스템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탈북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그는 아울러 "그런 중국의 입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홍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탈북자의 강제 북송은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국제난민협약에도 어긋난다는 한국 정부의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됨. 앞서 지난 19일 외교통상부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중국 정부에 현재 억류 중인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의 협약 준수를 촉구한 바 있음.
-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탈북자 수 십명을 붙잡아 북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중국 당국은 그러나 해당 탈북자들의 인적사항은 물론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조차 해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해당 탈북자들이 아직 북송된 것은 아



니지만, 북중 간의 '특수한' 관계로 볼 때 결국 북송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대만 해군, 잠수함 8척 도입 재추진(2/21)

- 대만이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재선 성공 후 잠수함 도입에 의지를 보이고 있음. 대만 해군은 8척의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는 계획을 최근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연합보와 영자지 타이베이 타임스가 21일 전했다.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잠수함 도입 계획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는 것임.
- 앞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01년 대만에 8척의 잠수함을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음. 하지만 미국이 그동안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지 않아 이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음. 대만 당국은 자체 기술을 활용해 잠수함을 만들거나 미국 외에 제3국으로부터 잠수함을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음. 현지 언론은 "3개 국가가 잠수함 기술 제공 또는 판매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음. 구체적으로 독일과 그리스 등이 해당 국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 대만 해군은 "미국으로부터 잠수함 도입에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으며 다른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대만은 잠수함 4척을 보유 중임. 이 중 2척은 유사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지만 나머지 2척은 1940년대에 건조된 낡은 것으로 알려졌다.

● 대만, 中공격 대비 잠수함에 미사일 탑재 계획(2/23)

- 대만이 유사시 중국의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중 잠수함에 대함(對艦) 유도미사일을 배치함. 대만 해군은 이런 계획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하푼 미사일(Harpoon missile)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 시험 발사를 완료했다고 연합보 인터넷망이 23일 전했다. 대만이 잠수함에 공격용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들 미사일은 대만이 네덜란드에서 도입해 보유 중인 2척의 잠수함에 탑재될 예정임.
- 하푼 미사일은 미 맥도넬더글러스사가 개발한 대함 유도미사일로 일반 함정, 전투기, 잠수함 모두에 장착할 수 있음. 대만 당국은 사거리가 120km인 이 미사일을 도입하면 보유 중인 잠수함의 장거리 공격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음. 대만은 최근 디젤 잠수함 8척을 기술이전 방식으로 자체 제작하거나 미국 또는 제3국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전투기인 F-16 C/D 전투기를 구매하는 협상에 의욕을 보이는 등 방위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美·日·호주, 괌 미군기지서 합동 공군 훈련(2/23)

- 미국과 일본, 호주의 공군이 괌의 미군기지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 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음. 이 통신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 호주 공군은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일정으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공중전과 전자전, 대규모 재해 등을 상정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 400명, 일본 항공자위대 330명, 호주 공군 300명이 참가하고 있음. 이 훈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앤더슨 기지를 중심으로 기지의 북동쪽 상공과 주변의 공대지 사격장 등을 활용해 이뤄지고 있음. 미 공군은 F16 전투기와 B52 폭격기를, 일본 항공자위대는 F2 전투기와 F15 전투기, E2C 조기경보기를 이 훈련에 투입했음.
 - 3국 공군의 합동 훈련은 이번이 처음임.

● UNHCR, 中 정부에 탈북자 송환 중단 촉구(2/24)

-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는 24일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처벌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송환 중단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음. 에이드리언 에드워즈 UNHCR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UNHCR은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25명 인권의 북한주민들의 상황을 밀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 당국과 대화해왔으며, 중국 정부가 난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음.
- 에드워즈 대변인은 또 "UNHCR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탈북자들의 최선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한 인도주의적 해법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 문제에 관해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자들은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들 가운데 10명은 북한인권단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음.

● 日자민당 헌법개정안, 왕을 '국가원수'로 명기(2/25)

- 일본의 제1야당 자민당이 헌법개정안에서 왕을 '국가 원수'로 명기하고 비상시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긴급사태조항'을 신설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자민당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헌법개정안에서 현행 헌법상 국가의 '상징'인 왕(일본에서는 천황으로 호칭)을 국가의 '원수'로 명기했음. 또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국기·국가와 연호(年號)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국가(國號)와 국기에 대해 국가의 '표상'으로 위치를 부여했음.
-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나 대규모 자연재해를 '긴급사태'로 규정해 총리의 판단으로 재정을 동원한 뒤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사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긴급사태조항'을 추가했음. 현행 헌법 9조의 전쟁포기 조항은 유지하면서도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군대의 지위를 명확하게 부여했으며, 중국의 해양진출 등에 대응해 자위군의 역할에 '영토영해의 보전'을 포함



- 했음. 현행 헌법상 용인되지 않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한편 군사재판소의 설치도 넣었음.
- 외국인참정권은 용인하지 않았으며, 선거권 부여를 일본 국적을 가진 성인으로 한정하는 '국적조항'을 신설했음. 현행 헌법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돼 있는 헌법개정안의 발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음.
 - 자민당은 헌법개정추진본부의 논의를 거쳐 오는 4월28일까지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음. 한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은 전쟁포기와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의 개정 논란과 관련, 향후 2년간 철저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뒤 국민투표로 방침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음.

● <중국兩會> ① 권력이양 앞둔 '안정'에 방점(2/26)

-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도래하고 있음.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다음 달 5일, 원로 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그에 앞서 3일 개막됨. 이 행사에는 중국 내 성(省)·시·자치구, 홍콩·마카오, 인민해방군에서 지방별, 직능별 대표 3천여 명이 참석해 올 한 해 중국의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문제와 발전방안을 논의함. 서양식 의회 민주주의가 아닌 중국식 민의 수렴 방식인 셴임.
- 올해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임. 이번 제17차 5차 전인대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권력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임. 올가을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18차 당대회(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중심의 제4세대 지도부가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를 필두로 한 제5세대로 자리를 물려줌. 이는 중국에서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로 이어져 온 사실상 10년 임기의 '평화적' 권력 이양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그런 탓에 중국은 올해 아무 탈 없이 권력을 바꾸고 차후 10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임. 따라서 중국의 최대 화두는 대내외의 '안정'임. 큰 이변이 없다면 후 주석을 이어 최고지도자로 등극할 시진핑 부주석의 이미지 부각에 중국이 근래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도 눈여겨볼 대목임.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시 부주석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주요 2개국)'의 지도자로서 부각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이미지에 중국 인민도 만족감과 안도감을 느끼는 표정임. 중국 매체들은 이달 중순 방미 기간에 시 부주석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만나 '할 말은 하는' 지도자이자 미국의 서민과도 쉽게 어울려 정담을 나누고 NBA 농구 관람을 하는 서민적 풍모에 초점을 맞췄음. 딱딱하고 근엄한 이미지의 후진타오 국가부주석과는 차별화된 이미지 부각인 셴임.
- 이런 가운데 관영 신화통신은 올 양회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안정 속



에서 발전을 추구한다"는 '온중구진(穩中求進)'을 꼽았음. 그러면서 올해를 "외부 환경변화가 우리의 손에 미치지 못하고 내부의 경제구조 전환도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고 규정했음. 지속하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더딘 미국의 경제회복, 그리고 저임금 중심의 저개발 구조에서 첨단 산업으로 경제발전모델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인식인 셈임. 통신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모두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봐서 난관을 돌파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양회는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강조했다.

-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될 정부공작보고에는 이런 기조가 담길 것으로 보임. 안정 속에서도 빠른 성장, 경제구조조정, 내수 확대가 올해에도 핵심단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의 왕이밍(王一鳴) 상무 부원장은 지난 21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낸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올해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래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5%가 될 것으로 예상했음.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내외적인 여건 악화로 경제 하강압력,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동력 상실이라는 악재가 있지만 적어도 8% 대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다.
- 지난해 중국이 9.2% 성장을 했던 전례로 볼 때 8.5% 성장 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음. 경착륙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임. 전문가들은 성장률 8% 이하를 경착륙으로 봄. 성장률이 1% 포인트 이상 빠지면 대규모 도산과 실업사태가 올 수도 있고 이는 사회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임. 물론 이러면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음.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중국이 희구하는 '안정'을 해칠 요인은 이곳저곳에 포진해 있음. 그 가운데서도 최근 불거진 보시라이(薄熙來) 충칭(重慶)시 당 서기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한 '왕리쥘(王立軍) 사건'은 중국 권력 구도에 큰 변화를 부를 가능성이 작지 않음. 본질은 왕리쥘 충칭시 부시장과 한 때 그의 '군주'였던 보 서기와 목숨을 건 권력싸움이지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중앙권력 구조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고 다툼으로 이어질 시안이라는 얘기임.
- 올 가을 제18차 당 대회에서 결정될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낙점'을 앞두고 공청단(共靑團·공산주의청년동맹) 소속의 광둥(廣東)성 왕양(汪洋) 당서기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태자당 소속의 보 서기가 낙마하면 지분 싸움이 불가피해 보임. 중국의 최고 권력은 후진타오 주석 중심의 공청단, 쑹칭홍(曾慶紅) 전 국가부주석의 태자당, 여전한 현실 권력인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상하이방 등의 3대 세력이 힘겨루기하는 구도여서 상대의 '불리'가 자신의 '유리'로 이어질 수 있음.
- 최근 부쩍 심해지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의 분리주의 운동도 올해 양회의 큰 두통거리라고 할 수 있음. 2009년 7월 우루무치(烏魯木齊)시에서 한족과 위구르인의 갈등이 폭력 시위로 번져 수천 명이 다쳤고 지난해 7월에는 허토펬(和田)시와 카스(喀什·카슈가르)시에서 각각 파출소 습격과 홍기 난동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불안함. 쓰촨(四川)성



아바현티베트자치주를 중심으로 지난 1년 새 20여 명이 중국 정부에 반
대하면서 분신 시도를 한 점도 중국 당국으로선 난감함.

- 중국 전역에 만연된 부정부패, 극심한 빈부차, 도농 간 소득격차, 부실
의료보험, 농민공 차별, 취업난을 포함해 중국의 안정을 해칠 요인은 곳
곳에 깔렸음. 이런 모든 문제가 양회로 올려질 예정임. 중국의 '선량들'
이 해법을 찾아낼지를 중국 인민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음.

● IHO실무그룹 활동종료.. '동해 보고서'제출(2/26)

- 동해(East Sea)의 영문 표기 문제 등을 논의해온 국제수로기구(IHO)
실무그룹이 활동을 종료하고 IHO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
졌음. 동해 표기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등 회원국간 입장으로 보고
서에는 그동안의 논의 경위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음. 이에 따라 국제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와 병기하는 문제는 IHO 4월 총
회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임. 한 외교 소식통은 26일 "IHO 실무그룹
(S-23 WG)이 그동안 논의됐던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회원국
에 최종 회람을 시켰다"면서 "동해 문제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서는 결론 없이 관련국의 입장만 기술됐다"고 밝혔음.
- IHO 실무그룹에서 남·북한은 그동안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주장했
으며 호주 등 상당수 국가가 '명칭 분쟁 해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지
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 일각에는 특정한 의견을 내지 않은 국가
까지 포함, 27개 실무그룹 회원국 중 과반 이상이 일본해 단독표기에
반대했을 것이라 분석도 있음. 그러나 일본은 '일본해 단독표기' 주장
을 굽히지 않고 있음. 지명에서 단일명칭 원칙(single name policy)을 표
방하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선진국도 일본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
졌음. 실무그룹 의장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되 각주나 부록 등
에 기술적으로 한국의 병기입장을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
나 우리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입장차
로 실무그룹은 '해양의 경계(S-23)' 4판 초안에 대한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음. 실무그룹의 보고서에 우리 정부의 병기 입
장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동해 표기 문제는 4월 23~27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IHO 총회로 넘어가게 됐음. 정부는 총회에서의 표 대결 가능성
등까지 염두에 두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유엔 산하 IHO는 2009년 7월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해양의 경계
(S-23)' 4판 초안을 작성하라는 임무를 부여했음. '해양의 경계'는 바다
의 국제적 명칭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책자로 1953년 3판 이후
아직 개정판을 내지 못하고 있음. '해양의 경계'는 1929년 초판에서 동
해를 'Japan Sea'로 표기했으며 이후 3판까지 일본해 단독 표기를 유지
하고 있음.